

“불법수입중고복사기와 비정품 문제등이 시장 발전 저해”

국내 복사기 업계의 동향과 과제

10여년전 IMF 이후 성장이 정체된 복사기의 국내시장은 그 동안 디지털화를 기점으로 하여 컬러화,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의 개발, 디지털인쇄시장 진입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사업의 다각화를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결국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업체 상호간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복사기업계에서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글 / 한국후지제록스(주) 마케팅실 최재봉 팀장

지난해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황은 국내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어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제 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천기술의 기반이 취약한 국내의 복사기업계에는 환율의 불안정과 국내판매량의 위축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

고환율은 일부 기업에 수출이익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출량에서는 전년에 대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기의 특성상 개인보다 기업을 위주로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불황으로 인해 내부 비용의 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복사기의 판매량이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있는 불법수입중고복사기와 비정품 시장은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틈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의 장려정책에 따라 재제조산업의 육성 대상품목에 복사기와 카트리지가 포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 또한 복사기업계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일부 대기업에서 시작된 복사기의 A3형 모델에서 A4형 모델로 대체하는 시장변화 주도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복사기, 프린터, 인쇄시장 등이 통합되어 복합화 되면서 순수한 복사기의 시장은 별도로 구분이 어려워 정도로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복사기 시장의 변화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중고복사기 시장의 확대

이미 『광학세계』를 통하여 여러 차례 다뤄졌듯이 복사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입중고복사기가 결국 국내 복사기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르는 어이없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직도 수입중고복사기의 대부분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 동안 업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잘못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광학기기협회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관련부서와 업계간 담화를 실시하여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행정규제의 완화정책, 국제적인 통상압력 등을 이유로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관련업계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복사기 시장의 변화

복사기 시장은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업종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변화 중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는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비용과 경제의 문제로 컬러화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다.

〈표〉최근 4년간 복사기시장의 변화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점유율	성장률	
아날로그	13,222	4,379	159	84	0.1%	-99.4%	
디지털	모노	60,152	69,239	77,795	75,857	87.0%	26.1%
	컬러	3,104	5,485	10,095	11,276	12.9%	263.3%
합 계	76,478	79,103	88,049	87,217	100%	14.0%	

(자료제공: 복사기업계, 중고수입복사기)

또한 세계시장의 변화와 국내시장의 한계로 복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개발되고 있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TCO 솔루션, 보안솔루션, 문서의 전자화 사업, 디지털인쇄 등 각 회사마다 새로운 기술과 영역의 개발을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대형 프린터업체에서 시작된 A4 복합기는 A3와 같이 중대형만 고집하던 복사기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으며, 이는 복사기와 프린터의 영역을 모호하게 하

여 법률적 구분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에 프린터가 포함되면서 일부 기종이 복사기로 인식되어 안전인증대상이 됨으로써 프린터업계의 인증 관련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복사기와 환경

복사기는 매우 많은 부품과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개발도 어렵지만 이로 인해 환경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 및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RoHS, EPR 등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개발 초기부터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폐기과정에서도 재활용과 폐기물에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후지제록스(주)에서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플라스틱을 이용한 친환경상품을 출시하여 관심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이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복사기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에 고민하고 있다. 이미 복사기에 사용되는 토너카트리지는 재제조품이 40%에 육박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복사기의 본체에 대한 재제조의 연구가 대두되고 있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자동차부품에 한정되어 있는 재제조 관련 법률이 품목을 확대하려는 정책과 외국의 사례를 빌미로 복사기의 본체를 재제조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문제는 역시 수입중고복사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관련단체에서는 매년 국내에서 폐기되는 복사기를 재제조하여 재사용하고 일부는 수출까지 한다는 명분이지만 현재도 외국에서 폐기된 엄청난 양의 복사기가 수입되는 현실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자동차에 버금가는 부품과 장치로 만들어진 복사기를 어디까지 재製조를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명분은 좋지만 조금 더 국내의 실상을 확인하고 정책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복사기업계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정부와 국민도 국내의 복사기관련 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한층 성숙된 정책과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야 하겠다.